

교육과 研究의 활성화 방안

金 璟 東

(서울大 社會學科)

1. 序

앞으로 다가올 情報化 시대는 인간의 머리와 거기에서 창출·처리·전달되는 정보를 주로 다루는 일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될 터이므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그중에서도 高次元의 정보와 정보 처리 과정을 취급하는 일은 大學教育을 받은 전문 인력이 거의 도맡아 하게 될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비중 또한 커진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견은 진작부터 나타났으나, 오늘 우리 대학의 현실은 그와는 너무도 먼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대학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大學의 주요 기능이 교육과 연구라는 것을 여기에 되풀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 중심 기능들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킬 까닭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학의 본래적인 기능을 正常化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더욱 活性化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그 길을 열어 가고자 온 사회가 정성을 모으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

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려 하거니와,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는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언급을 간략히 하면서 곧바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흔히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부실한 탓을 외부의 環境的 요인에 돌리고 그러한 여건만 개선되면 곧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곤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가령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논지가 가장 보편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외적 환경 요인들과 아울러 모른지기 대학 制度 자체와 대학 內部的 문제점들도 동시에 점검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外的 與件의 改善

대학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외적 여건의 개선을 논할 때도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비물질적인 요소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1) 物質的 支援의 擴充

실질적으로 대학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연구

활동에 활기를 띠자면, 우선은 재정적 뒷받침이 긴급한 선결 요건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교육 여건부터 살펴 보자.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990년 현재 국립대학은 평균 24명, 사립대학은 35명이나 된다. 이는 이집트의 28.2명(1987), 방글라데시의 26.6명(1986)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전임교수 확보율이 교육부의 낮은 기준에 의거해서조차도 70% 미만인 대학이 전국에서 68.4%에 이르며, 외대講師가 담당하는 강의시간도 국립 25%, 사립 46%나 된다. 실험실습실 확보율이 법정 기준 미만인 대학이 국립 중의 63%, 사립 중의 74%라는 게 현실이다.

연구 활동이 부진한 것도 마찬가지다. 교수가 한 해에 발표한 연구 논문 수가 평균 1.2편, 저술한 책은 0.15권 정도에 그치고 있다.¹⁾ 아직도 교수가 주당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야 하는 대학이 43.2%나 되는 조건에다, 근자에 연구비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교수들이 태반인 상황을 두고 연구의 활기를 기대한다면 언어도단일 따름이다. 그뿐 아니라 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도 1년 내내 개점 휴업 상태인 사례가 더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이 財政의 부족에서 연유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정부나 재단, 기업들이 대학의 육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재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립대학에서는 23% 정도에 그치지만, 사립대학에서는 73%에 이른다.²⁾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正道다. 고등교육의 목적적 가치는 차치하고라도 그 수단적 가치 면에서 개인에게는 지위 향상의 통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스스로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의 수혜자는 개인이나 가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와 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는 주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개인과 가계가 비교적 냉엄한 경쟁의 원리에 따라 교육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계층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의 균형과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이 교육 투자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관점도 있다.

다만 國家의 재정 능력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로 초등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데 급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고등교육의 수준에서도 국가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심하게 말해서 재정 적자를 감당하는 한이 있어도 대학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려는 의지가 시급히 요청된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유별난 우리나라에서 가계의 차원에서 여기에 소모되는 교육비를 교육세라는 특정 목적세와 기타 재산세 등의 형식으로 흡수하여서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에까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양성하는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經濟界도 그 나름의 수혜자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교육으로 반드시 흘러 들어 와야 한다. 사실 국가가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면, 기업은 대학교육의 주된 수혜자이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마땅히 기업이 고등교육에 투자할 명분이 있다.

다만 국가와 기업의 投資 방법과 절차에는 分業과 差別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국가는 교수 충원과 기초 연구를 위한 연구비 투자에 집중하고, 기업은 시설과 실용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대학과 기업 간에 인적 교류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간접 지원을 시도할 적도 하다.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대학에 寄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 요청된다. 기부 행위를 반드시 입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발전지표」, 1990.12, pp.45~67; 조선일보, 1989.1.11.

2) 「상계서」, p.89.

학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나, 기업이 대학에 기여를 할 때에는 稅制上 優待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특히 기부금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강렬한 평준화 의식과 관련하여 자칫 저항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수의 자질 향상과 연구 振作을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기여에 의한 碩座 교수제 같은 것은 대학마다 주저없이 하루 속히 채택할 필요가 있고, 기업과 개인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사립대학에서는 재단의 운영을 합리화·효율화하여 대학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충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사학 재단들이 불명예스러운 관행으로 인하여 지탄을 받으면서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던 점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이 영리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라도 育成해야 하는 교육·연구 기관임을 재확인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증대시키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2) 非物質的 干涉의 排除

대학의 연구·교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작용하는 외적 요인 중에 물질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물질적인 요인이다. 여태까지 우리의 대학은 외부로부터 갖가지 압력과 간섭을 받으며 위축된 데로 위축된 상태에서 교육과 연구에 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나 재단 또는 기업이 번번찮은 재정 지원을 하면 하는 대로, 지원도 하지 않을 때는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별의별 간섭은 다하고 쓸데 없는 압력 행사에 제미들여 온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

學問의 自由가 보장되지 않은 대학에서 올바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진리다. 더군다나 이제는 민주화의 시대로 돌입하였고 또 대학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간섭과 압력 행사가 지속되다가는 우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이나 사회정치의 발전을 기할 도리가 없으므로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가든, 재단이든, 기업이든, 개인 독자가든 간에 각종 지원은 最大限으로 늘리되, 간섭은 最小限으로 줄이는 자세가 요청된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의 대학을 살리고 키우는 가장 요긴한 비물질적인 지원이라 하겠다.

국가에 의한 대학의 통제·간섭은 학문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측면보다는 한층더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현재로서는 대학의 설립, 정원 책정, 등록금 결정, 교과과정 구성, 입학과 졸업, 연구비 배정, 장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기본 방향과 교육의 質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과 대학 공동체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일이 간섭받는 대학에서 행정·경영이 합리화되어 교육의 정상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역시 과거에 대학이 제 기능을 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던 대학의 政治化 현상이다. 이는 물론 사회 전반의 不條理와 不義를 참고 보지 못하는 젊은 대학 지성들의 울분과 정의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처럼 순수한 이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이 사회에 존재하였으므로 학원이 어처구니없게도 낭비적인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불행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정상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여 발전하려고 할 때, 어떤 명분으로도 외부 勢力이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치화의 患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사회 전체의 정치 풍토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실로 촉망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의 비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이 대학에 대한 지원은 증대시키고 간섭은 최소화하며 대학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첩경일지도 모른다는 논지가 그럴싸하게 들린다.

3. 大學自體의 改革

어떤 집단이든지 자율에는 책임을 수반한다.

대학이 외부적 여건의 개선을 희망하는 만큼 자체의 정비와 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때만이 올바른 방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의 정상화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이 고쳐야 할 것도 대학의 위상 자체와 대학 내의 여러 요소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大學의 位相 變化에 의한 改善

여기서 대학의 위상이란 개개의 대학들이 제 기능을 하기에 알맞은 모습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계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본디 日本과 美國의 대학 제도를 본떠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의 모순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전형적인 보기가 모든 대학이 크건 작건, 서울이건 지방이건, 국립이건 사립이건 거의 모든 면에서 닮은 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구성에서부터 교과과정에 이르는 전 부문에서 百貨店式 나열을 한 것은 한마디로 대학 정책의 不在를 여실히 노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육과 연구의 質이 떨어지고 대학 간의 불필요한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겼음을 진작에 알아 차렸으면 지체없는 개선이 따라야 했다.

가령 앞으로 대학의 설립과 정원 책정, 등록금 결정 등 많은 면에서 자율화가 실현된다고 할 때, 국민 일반의 대학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미루어 대학 증설과 증과, 증원의 요구는 터진 물고마냥 밀려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때에 기존의 대학은 물론 신설 대학들마저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대학과 학과 구성을 답습한다면 그 낭비야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대학 간의 分業과 多樣化를 위한 자체 정비에 나서야 한다. 지역적 여건, 대학의 인력과 시설 면에서의 능력, 그 밖의 특수 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성격상 서로 다른 대학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을 다양화한다는 말은, 예컨대 어떤 대학이 주로 공업 기술 계통에서 수월성을 얻고자 다른 인문 분야는 아예 두지 않든가, 아니면 교양교육을 위한 과정 정도로 극소화시켜 特性을 뚜렷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주요 분야들을 망라하더라도 특정 분야를 重點育成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주요 분야에서 우수성을 확보할 자신이 있을 때는 말 그대로의 綜合大學으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분야에 따른 다원성의 조장도 중요하지만, 大學院 과정의 설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대학원을 무차별적으로 설립 허가하였고, 모든 대학이 온갖 고급 學位들을 수여하는 일로 서로 경쟁을 하는 위치에 이르렀 으면서도 그 학위의 質은 누구도 옳게 감독하지 못하여 교육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왔음은 깊이 성찰할 일이다. 그 배경에 어떤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든 간에 이제는 그러한 지엽에 눈가림 당하지 말고 대학들 스스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분업의 방향으로 자체 조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로 學士 과정 수준의 교육 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특성을 가장 잘 살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碩士 수준까지만이라도 충실한 교육을 하기로 작정한 대학도 생겨나야 한다. 한편, 거의 완벽하게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다음껏 뻗어 가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博士學位 과정을 두고 학생이 한두 사람이라도 그 분야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대학도 극소수지만 있어야겠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인 대학교육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유용할 뿐 아니라 각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質을 높이기 위한 또하나의 길은 대학 評價制度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는 개인이나 집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일을 적당히 넘겨도 될 만한 시대는 지났다. 적당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발전이나 정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문화적 덕목인 양 능치기 아까워하는 태도는 이제 버려도 될 때가 왔다. 대학 공동체가 인정하는 專門家 집단에 의

하여 분야별로 업적을 평가하는 일은 잘못될 것이 없다. 이러한 평가 제도는 결국 대학의 구성원을 평가하는 것과 다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업적을 쌓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다. 학생 선발에서도 대학의 평가가 공개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人間管理의 改善

대학의 중심은 사람이다. 구성 요소는 교수, 학생 및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이다. 교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보상에서 우대를 하지 못하면 그 직업적 지위에 걸맞는 교수와 연구업적을 내도록 시간과 정력을 일에 헌신·몰입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儒敎的인 습 때문에 학자가 경제적 보상을 운위한다는 것을 금기시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 그리고 교수의 전문성을 높이자면 몇 해에 한 번씩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교수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현실을 타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교수의 講義 시간 부담도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의와 교수도 많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적은 수와의 대화가 훨씬 효과적이다. 교수 각각의 연구나 교수의 연구 활동에 대한 학생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의 참여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교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교수 총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교수의 임용, 승진, 보상 및 정년에서는 철저한 전문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평가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매년 각자가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을 기록·보고케 하고 학자 공동체가 위임하는 위원회가 이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업적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까지 인습적인 年功序列이나 따지며 대학의 발전을 막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보상은 급여, 승진, 포상 등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수의 업적·활동 평가는 단순히 연구 업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의 능력, 행정 보직 업적, 학생 지도력, 대외 봉사 실적 등을 통틀어 감안하는 것이 온당하다.

대학에 진학하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과거만

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관행은 우리나라 대학의 특유한 기현상이다. 이는 중등교육의 입시 지향적 교육이 낳은 왜곡인 줄은 다 안다. 그러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풍토는 무슨 명분으로도 빈명이 되지 않으며, 시급히 극복해야 할 악습이다. 여기에 정치적 바람까지 가세한다면, 이 또한 어떤 희생을 각오 하고라도 막아야 옳았다. 이 문제는 우선 학생 스스로가 성취하여야 할 일이지만, 대학의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敎權의 정립이 선결 과제다. 교권의 정립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의 철회에 의한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자율성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실효가 있게 되며, 이에 맞추어 교수 자신은 철저한 전문가 정신으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는 자세 정리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실질적인 誘因이 필요하다. 장학 제도를 확충하는 일은 급선무이지만, 특히 대학원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학위 과정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재정적인 뒷받침을 보장하는 제도와 재정적 원천이 필수적이다. 이는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활동을 돕는 助教制度와도 직결된다.

그리고 직원 집단은 행여 관료주의적 기독된 수호에 급급하지 말고, 교육 기관에 봉사하는 전문인답게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헌신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적 분야에서 專門性을 확보하는 교육과 인사관리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組織과 運營의 合理化

대학의 조직 원리와 운영 지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고등교육 기관이라는 전제를 굳게 다지고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조직의 단위를 지금의 單科 대학 및 學科 위주로 경직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과감히 벗어나 교육과 연구 수행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미래의 정보사회는 학문이나 전문적 훈련이나 경직된 틀을 고집하는 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적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그러한 제편성은 각 대학의 특성을 잘 반

영하는 것이어야지 또다시 획일적인 변혁만을 꾀한다면 이 또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보기로, 대학원 중심의 연구지향 대학에서는 아예 학과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학문의 성격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이 가능하게끔 융통성 있는 조직을 갖는 방법이 있다. 교수는 전문 분야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모일 수도 있고, 학생들은 비교적 영역이 넓은 전공 분야 조직에 속하여 전공을 여러 가지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다.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더한층 좁히겠지만, 이때에도 지나친 분화는 삼가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 학사 과정의 교육에만 국한시키는 대학도 지나친 전공 분화는 불리하다.

이와 같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대학으로 하여금 학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권한을 돌려 주어야 한다. 학생 선발에서부터 대학 특성에 맞게 특색 있는 전형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진급, 학점 이수, 전공과 부전공 제도, 평가와 졸업 등 일체의 학사 운영 원칙도 각 대학이 창의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국가와 대학 전담 집단이 제시하는 기본 표준에 최소한도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

4. 結

대학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나 대학의 견지에서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많은 제약 조건과 장애로 가득하다. 대학이 정상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친 지가 벌써 몇 개 성상이 되었는가 자문해 보면 어이가 없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나치게 理想的이라 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을 하였거니와, 되풀이 말하자면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는 벼랑에 다가가 있다는 위기감을 금할 길이 없다.

전 세계가 무서운 속도로 소용돌이 치며 변하고 있을 뿐더러 미래의 정보화 시대가 기약하는 사회란 인류가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펼쳐 질지도 모르는 판국에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명목만을 부여안고 허덕이는 우리의 대학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교육 기관으로 전락할 운명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논리에 가끔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교육이 걸으로 번지르르한 데 비해 內容은 너무도 不實하다는 인상을 씻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 위에 앞으로 대학이 제 구실을 하려던 결국은 교육과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을 하루 속히 취하는 도리밖에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과감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도와 조직의 정비가 아무리 중요한 바탕을 마련한다 해도 그 제도의 개혁과 운용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의 내용과 자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실효를 기대하기란 극히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人間의 의지와 결단이 변화를 가져올 수도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정부 당국의 결심, 기업의 결단, 국민 자자의 자세 전환과 아울러 대학 구성원들의 획기적인 자세 변화라 하겠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로써 제 자리 찾아 발전의 틀을 잡지 못하던 사회 전체의 발전도 기약할 길이 없다는 심각한 자성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합심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